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6. 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3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3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6
3. 부패 경험	9
4. 공정에 대한 인식	10
5.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 체감도	12

I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 방법	RDD 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방문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전화조사
신뢰 수준 (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 기간	(상반기) 6/10~6/17	(상반기) 6/11~6/24	(상반기) 6/10~6/24	(상반기) 6/10~7/5	(상반기) 6/14~6/25
	(하반기) 10/2~10/16	(하반기) 10/8~10/29	(하반기) 10/7~11/1	(하반기) 10/14~11/6	(하반기) 10/14~11/5

※ 점수 환산 : 5점 척도로 설문 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패인식지수 도출

구분	매우 부패	부패	보통	청렴	매우 청렴
5점 척도	1	2	3	4	5
10점 환산점수	0.0	2.5	5.0	7.5	10.0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 평가이유 • 사회 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부패 발생 원인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무원의 부패수준 • 공무원에 대한 부패 평가이유 • 행정 분야별(11개) 부패수준
부패 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 지난 1년간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공정수준 • 분야(10개)별 공정수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 체감도	•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1.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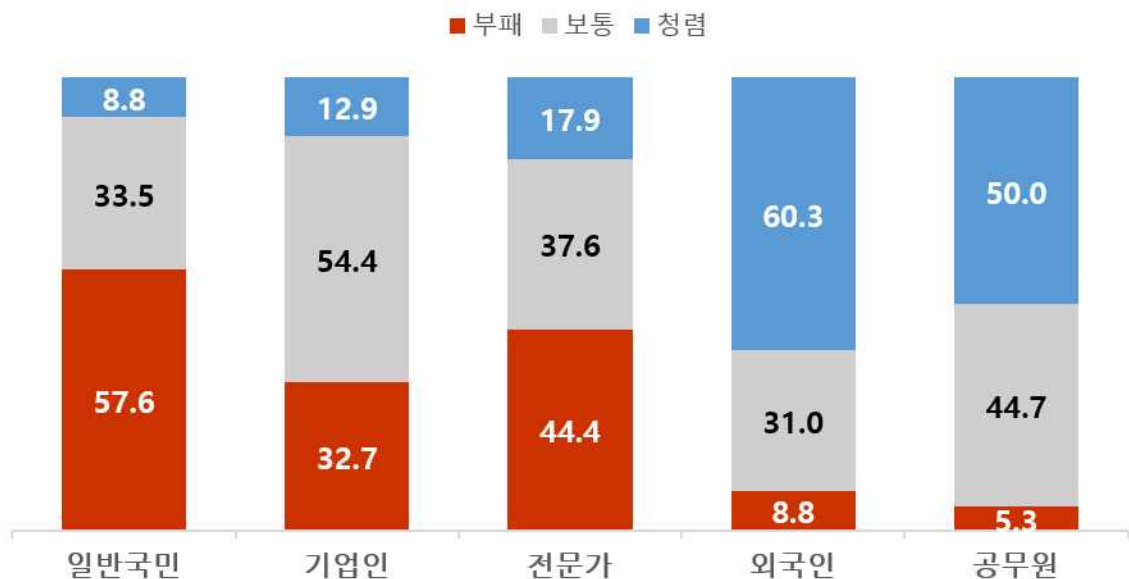
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57.6%인 반면, 공무원은 5.3%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 존재

※ 일반국민(57.6%),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단위: %)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3.20	4.40	4.10	6.77	6.31

※ 부패인식지수 :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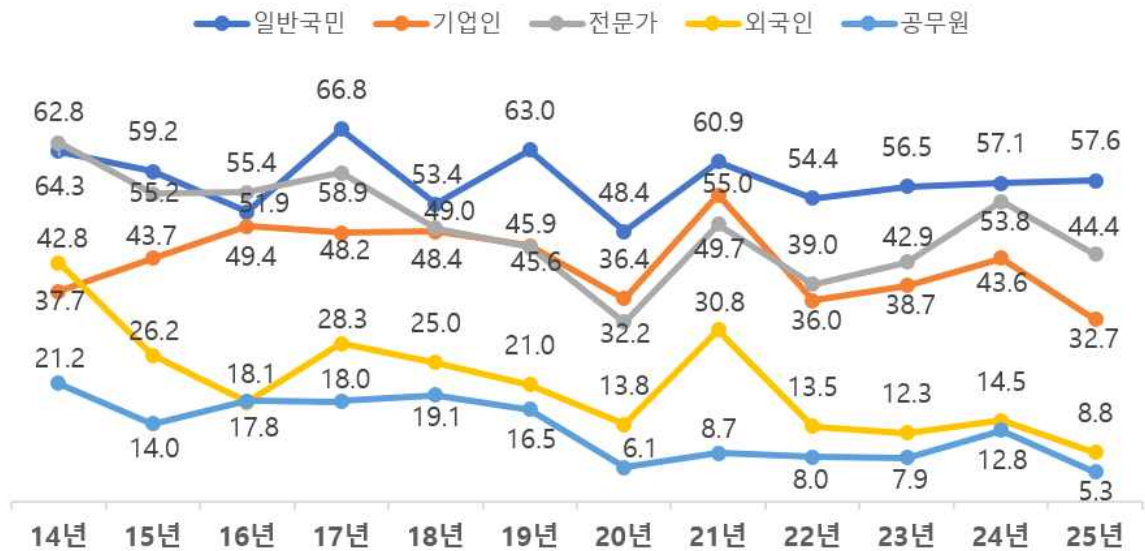
-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외국인(▼5.7%p) 유형 순으로 감소

※ 일반국민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0.5%p 증가(57.1%→57.6%)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62.8	59.2	51.9	66.8	53.4	63.0	48.4	60.9	54.4	56.5	57.1	57.6	▲0.5%p
기업인	37.7	43.7	49.4	48.2	48.4	45.9	36.4	55.0	36.0	38.7	43.6	32.7	▼10.9%p
전문가	64.3	55.2	55.4	58.9	49.0	45.6	32.2	49.7	39.0	42.9	53.8	44.4	▼9.4%p
외국인	42.8	26.2	17.8	28.3	25.0	21.0	13.8	30.8	13.5	12.3	14.5	8.8	▼5.7%p
공무원	21.2	14.0	18.1	18.0	19.1	16.5	6.1	8.7	8.0	7.9	12.8	5.3	▼7.5%p

나.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 평가이유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공무원은 '부패인식 수준·기대치 상승'을, 그 외 조사 대상은 모두 '언론보도의 영향'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 평가이유 】

(단위: %, %p)

부패 평가이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실제 우리 사회 내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0.3 (▲3.4)	63.8 (▲6.8)	57.3 (▼4.8)	42.9 (▲22.2)	54.1 (▲0.2)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27.7 (▲1.1)	17.9 (▼4.4)	18.5 (▲9.1)	28.6 (▼4.2)	17.6 (▼6.9)
우리 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10.6 (▼4.1)	5.7 (▼1.2)	7.8 (▼1.3)	20.0 (▲4.5)	8.1 (▼0.2)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8.5 (▲0.8)	11.4 (▲0.6)	11.0 (▼2.2)	8.6 (▼19.0)	20.3 (▲10.9)

다. 사회 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부패분야)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분야를, 외국인은 '종교단체'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 (청렴분야)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교육' 분야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

【 최근 3년간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5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종교단체	정당·입법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문화·예술·체육	행정기관
'24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23년	가장 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가장 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 사회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정당·입법	사법	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교육	문화·예술·체육	노조·노동단체
일반국민	2.42	2.63	3.82	4.11	4.41	2.69	3.33	3.93	4.49	4.29	3.63
기업인	3.53	3.61	4.66	4.72	4.70	3.40	3.97	4.61	4.95	4.39	4.35
전문가	2.78	3.15	4.35	4.28	4.59	3.08	3.54	4.23	4.97	3.77	3.61
외국인	6.22	6.48	6.64	6.80	6.37	6.56	6.16	6.77	6.80	6.92	6.66
공무원	5.32	5.61	6.70	6.50	6.00	5.34	5.69	6.13	6.56	5.96	5.95

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원인

-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공직사회 내 부정한 관습·관행'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외국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를, 공무원들은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부패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원인 】

(단위: %, %p)

부패 발생원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공직사회 내 부정한 관습·관행	37.7 (▲0.2)	32.1 (▼0.6)	37.8 (▼0.9)	17.5 (▼4.7)	16.1 (0.0)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14.6 (▲1.8)	22.9 (▲3.9)	17.5 (▲4.0)	22.3 (▲2.8)	19.0 (▼8.1)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4.2 (▼0.9)	15.6 (▲3.7)	11.3 (▼0.1)	19.3 (▲8.8)	33.1 (▲13.0)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	13.8 (▲0.8)	16.6 (▲2.9)	9.8 (▲1.9)	16.3 (▼8.2)	14.7 (▲7.1)
사회 내 공정성 결여	9.7 (▼1.7)	6.6 (▼6.7)	11.6 (▼3.2)	12.5 (▼0.3)	10.7 (▼6.1)
성공 지상주의 만연	8.1 (▼2.1)	5.9 (▼0.5)	9.8 (▼1.5)	11.0 (▲1.0)	6.1 (▼4.8)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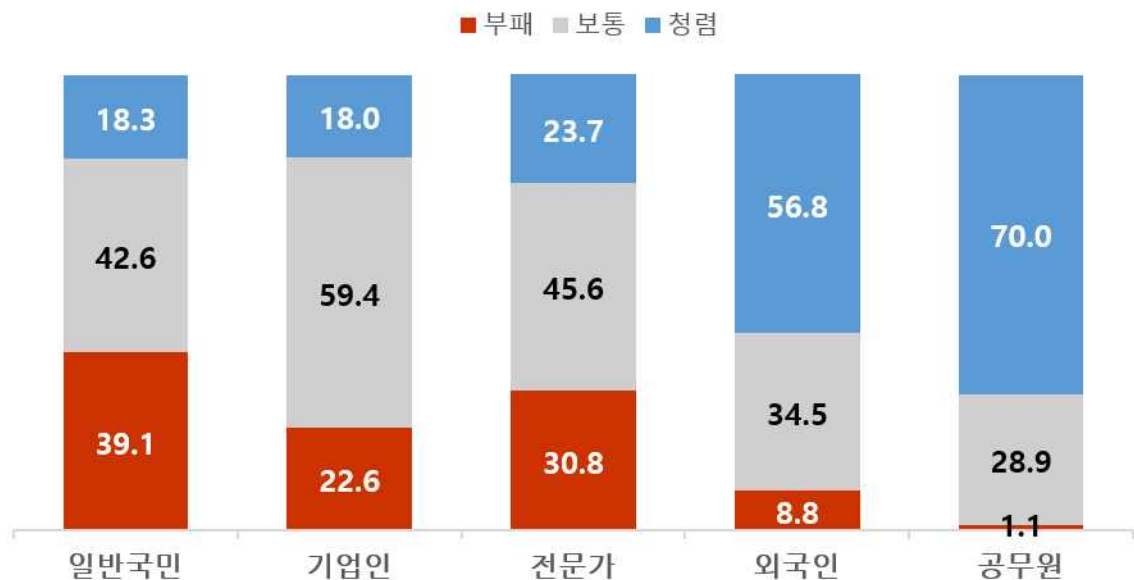
가. 공무원의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39.1%인 반면, 공무원은 1.1%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 존재

※ 일반국민(39.1%), 전문가(30.8%), 기업인(22.6%), 외국인(8.8%), 공무원(1.1%) 순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단위: %)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4.22	4.85	4.74	6.59	7.13

※ 부패인식지수 :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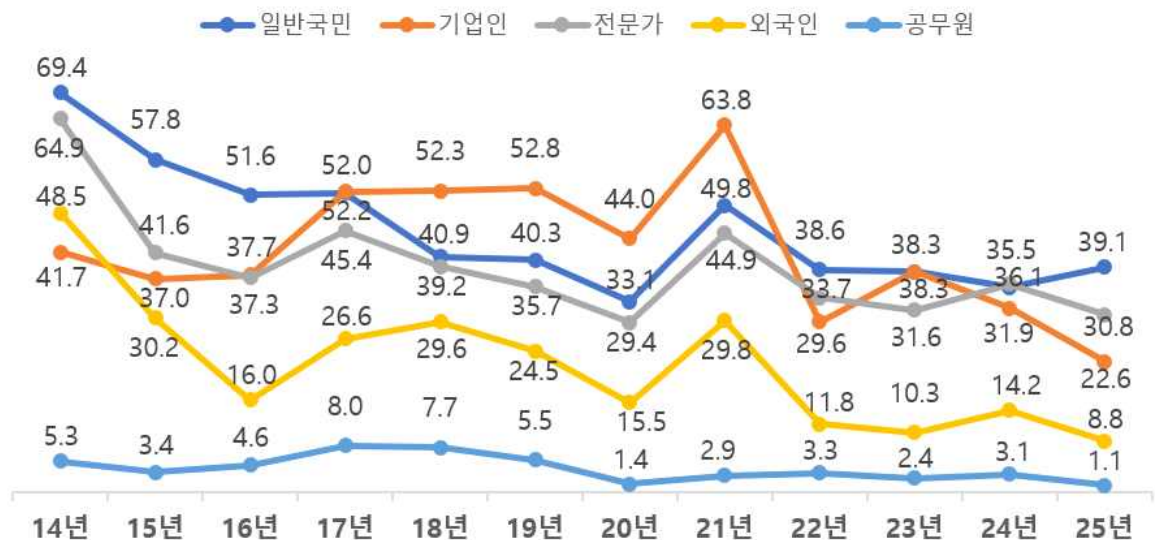
○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기업인(▼9.3%p), 외국인(▼5.4%p), 전문가(▼5.3%p), 공무원(▼2.0%p) 유형 순으로 감소

※ 일반국민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3.6%p 증가(35.5%→39.1%)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부패하다' 응답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69.4	57.8	51.6	52.0	40.9	40.3	33.1	49.8	38.6	38.3	35.5	39.1	▲3.6%p
기업인	41.7	37.0	37.7	52.2	52.3	52.8	44.0	63.8	29.6	38.3	31.9	22.6	▼9.3%p
전문가	64.9	41.6	37.3	45.4	39.2	35.7	29.4	44.9	33.7	31.6	36.1	30.8	▼5.3%p
외국인	48.5	30.2	16.0	26.6	29.6	24.5	15.5	29.8	11.8	10.3	14.2	8.8	▼5.4%p
공무원	5.3	3.4	4.6	8.0	7.7	5.5	1.4	2.9	3.3	2.4	3.1	1.1	▼2.0%p

나. 공직사회 부패 평가이유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공무원은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 상승'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평가이유 】

(단위: %, %p)

부패 평가이유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30.7 (0.0)	44.9 (▲3.6)	25.9 (▼1.3)	42.9 (▼6.2)	18.8 (▲2.5)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26.3 (▼4.8)	14.6 (▼2.9)	19.3 (▲1.3)	11.4 (▼2.6)	18.8 (▼6.8)
가족,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동료의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5.3 (▲4.5)	5.1 (▼3.4)	13.2 (▼1.7)	20.0 (▼2.8)	18.8 (▼2.1)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13.4 (▲0.3)	3.2 (▼4.0)	23.4 (▲4.1)	14.3 (▲5.5)	6.3 (▼17.0)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13.1 (▲1.8)	31.6 (▲11.4)	16.2 (▲1.3)	8.6 (▲3.3)	37.5 (▲25.9)

다. 행정 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부패분야) 일반국민·기업인·공무원은 ‘검찰·교정 등 법무’ 분야를, 전문가는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 (청렴분야) 모든 조사 대상이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

【 최근 3년간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5년	가장 부패: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부패: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24년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 등 법무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23년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부패: 건설·주택·토지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가장 청렴: 소방

【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일반국민	4.84	4.31	4.81	6.80	4.31	3.42	3.18	5.24	5.30	5.18	4.60
기업인	5.21	4.57	4.89	6.42	4.80	4.12	3.56	4.89	5.36	5.24	5.24
전문가	4.94	4.49	4.90	6.88	4.28	3.16	3.56	5.08	5.30	5.28	4.36
공무원	7.15	6.56	6.78	7.55	6.59	6.03	5.92	6.95	7.00	7.02	6.95

3. 부패 경험

가. 부정청탁 경험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험은 일반국민이 1.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으나, 기업인은 0%(▼0.7%p), 외국인인 0.3%(▼0.5%p)로 개선

【 부정청탁 경험률 추이 】

(단위: %)



부정청탁 경험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2.1	0.6	0.5	0.5	0.7	0.5	0.8	0.8	1.0	▲0.2%p
기업인	2.9	1.3	2.4	1.0	10.4	0.1	1.1	0.7	0.0	▼0.7%p
외국인	1.0	1.0	1.3	3.3	5.0	0.5	0.0	0.8	0.3	▼0.5%p

※ 부정청탁 경험은 '17년부터 조사

나.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이 1.2%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으나, 기업인은 0%(▼1.4%p), 외국인인 0.3%(▼0.7%p)로 개선

【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률 추이 】

(단위: %)



금품·접대 제공 경험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2.0	2.4	1.9	1.4	0.5	0.6	0.4	0.4	0.4	0.7	0.5	1.2	▲0.7%p
기업인	3.9	3.9	3.1	2.3	1.6	1.4	2.1	8.6	0.1	0.6	1.4	0.0	▼1.4%p
외국인	4.3	1.0	0.8	0.3	2.0	2.3	2.0	2.5	0.3	0.0	1.0	0.3	▼0.7%p

4. 공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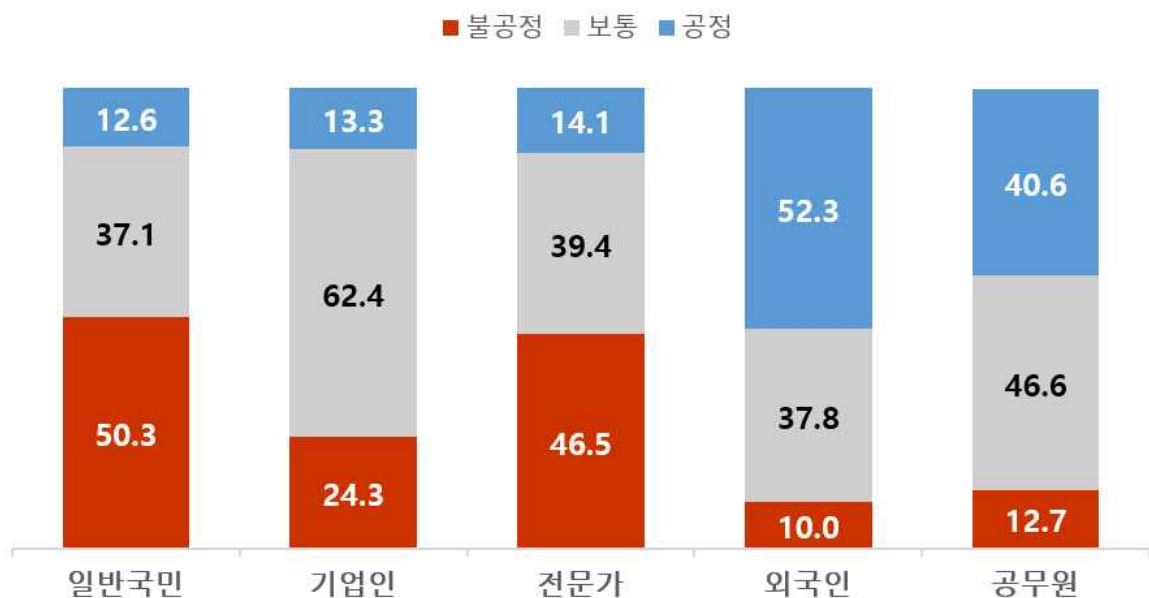
가. 우리 사회의 공정수준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50.3%인 반면, 외국인은 10.0%로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 일반국민(50.3%), 전문가(46.5%), 기업인(24.3%), 공무원(12.7%), 외국인(10.0%) 순

【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인식 】

(단위: %)



【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인식지수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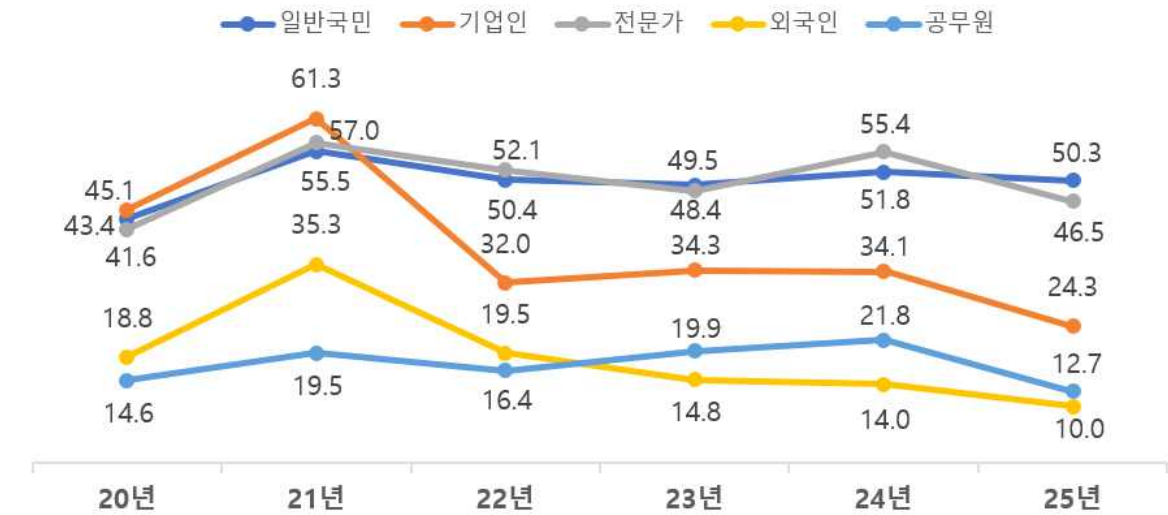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3.73	4.69	4.01	6.41	5.84

※ 공정인식지수 : 공정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높을수록 공정하다는 의미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기업인(▼9.8%p), 공무원(▼9.1%p), 전문가(▼8.9%p), 외국인(▼4.0%p), 일반국민(▼1.5%p) 유형 순으로 감소

【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인식 추이 】

(단위: %)



'불공정하다' 응답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증감
일반국민	43.4	55.5	50.4	49.5	51.8	50.3	▼1.5%p
기업인	45.1	61.3	32.0	34.3	34.1	24.3	▼9.8%p
전문가	41.6	57.0	52.1	48.4	55.4	46.5	▼8.9%p
외국인	18.8	35.3	19.5	14.8	14.0	10.0	▼4.0%p
공무원	14.6	19.5	16.4	19.9	21.8	12.7	▼9.1%p

※ 공정에 대한 인식은 '20년부터 조사

나. 분야(10개)별 공정수준

- (불공정분야) 모든 조사 대상이 '지역개발' 분야를 가장 불공정하다고 응답
- (공정분야) 일반국민·전문가는 '복지제도' 분야를, 기업인·공무원은 '교육기회' 분야를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

【 최근 3년간 분야별 공정수준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5년	가장 불공정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가장 공정	복지제도	교육기회	복지제도	교육기회
'24년	가장 불공정	지역개발	법 집행	지역개발	지역개발
	가장 공정	복지제도	교육기회	복지제도	교육기회
'23년	가장 불공정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가장 공정	복지제도	복지제도	복지제도	복지제도

【 분야별 공정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교육기회	입시제도	채용	복지제도	법집행	소득 및 재산 분배	지역개발	대기업-중소 기업 관계	성별에 따른 대우	나이/세대에 따른 지원
일반국민	4.55	4.28	3.90	4.89	3.26	3.86	3.10	3.32	4.60	4.45
기업인	5.36	5.02	4.50	4.95	4.20	4.56	3.97	4.06	5.09	5.10
전문가	4.29	3.78	3.49	4.86	3.37	3.39	2.37	2.68	4.49	4.18
공무원	6.23	5.70	5.58	6.16	5.53	5.57	4.90	5.11	6.04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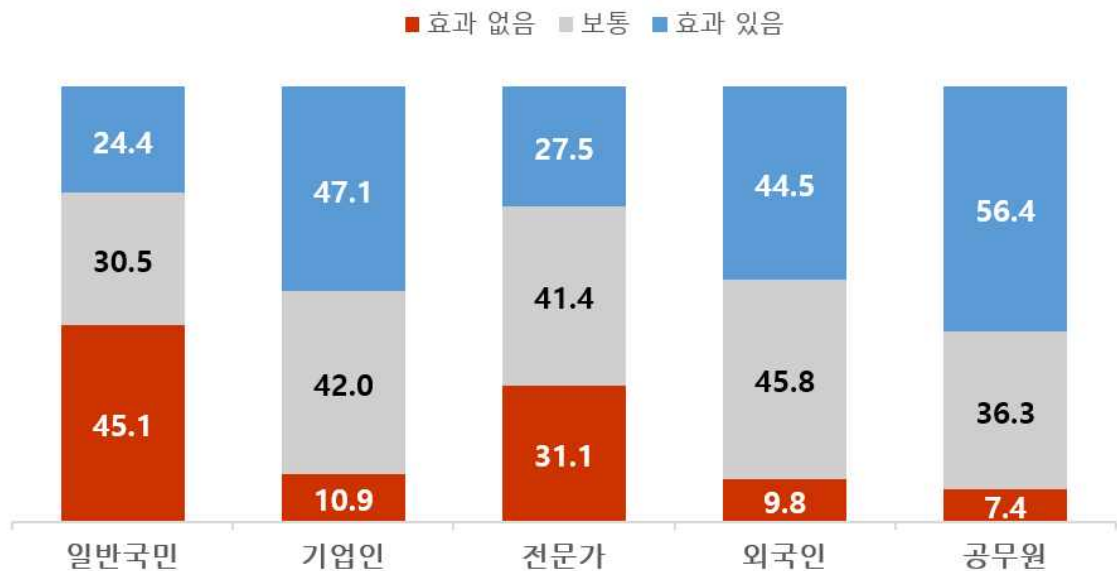
5.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 체감도

가.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모든 조사 대상에서 전년 대비 반부패 정책추진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기업인(▲27.0%p), 외국인(▲19.5%p), 공무원(▲15.4%p), 일반국민(▲6.8%p), 전문가(▲4.5%p) 순
-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일반국민, 전문가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높았음

【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

(단위: %, %p)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효과가 있다	24.4 (▲6.8)	47.1 (▲27.0)	27.5 (▲4.5)	44.5 (▲19.5)	56.4 (▲15.4)
보통이다	30.5 (▲3.1)	42.0 (▲7.0)	41.4 (▲12.0)	45.8 (▼14.9)	36.3 (▲1.5)
효과가 없다	45.1 (▼9.9)	10.9 (▼34.0)	31.1 (▼16.5)	9.8 (▼4.5)	7.4 (▼16.8)

나.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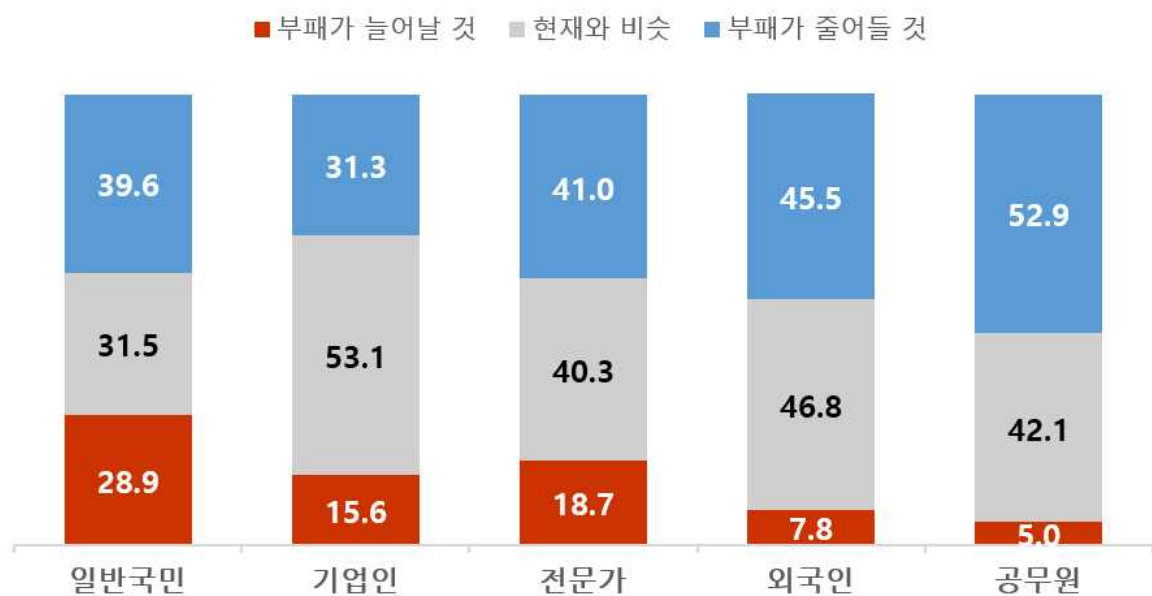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모든 조사 대상에서 전년 대비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전문가(▲19.5%p), 외국인(▲17.0%p), 일반국민(▲14.7%p), 기업인(▲14.0%p), 공무원(▲12.5%p) 순

- 모든 조사 대상에서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이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

(단위: %, %p)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든 것	39.6 (▲14.7)	31.3 (▲14.0)	41.0 (▲19.5)	45.5 (▲17.0)	52.9 (▲12.5)
현재와 비슷할 것	31.5 (▼10.2)	53.1 (▼2.2)	40.3 (▼3.2)	46.8 (▼14.2)	42.1 (▼5.6)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	28.9 (▼4.5)	15.6 (▼11.8)	18.7 (▼16.3)	7.8 (▼2.7)	5.0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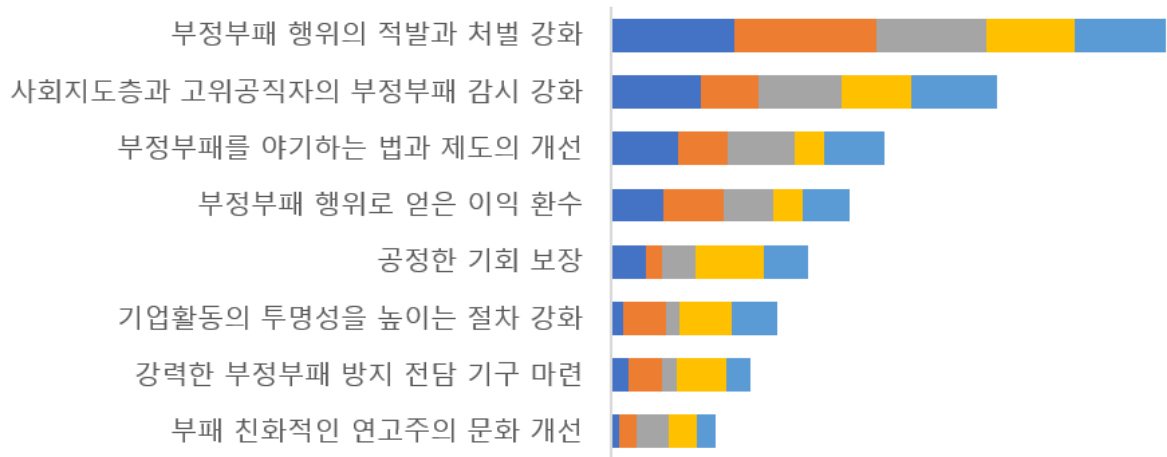
다.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이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
 - 다음으로 기업인은 ‘부패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를, 그 외 조사 대상은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감시 강화’를 응답

【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p)

■ 일반국민 ■ 기업인 ■ 전문가 ■ 외국인 ■ 공무원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의 적발과 처벌 강화	29.7 (0.0)	33.9 (▲3.1)	26.3 (▲2.5)	21.3 (▼3.2)	21.8 (▼1.1)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강화	21.4 (▼4.8)	13.9 (▼5.8)	20.0 (▼7.6)	16.8 (▲0.6)	20.4 (▼0.8)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16.2 (▲3.7)	11.7 (▲0.4)	16.2 (▲2.4)	7.0 (▼8.0)	14.4 (▲2.3)
부정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	12.7 (▲2.1)	14.4 (▲4.1)	11.7 (▲2.3)	7.3 (▼1.2)	11.1 (▼1.2)
공정한 기회 보장	8.4 (▼1.6)	3.7 (▼3.2)	8.3 (▼2.3)	16.3 (▲2.3)	10.7 (▼4.7)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 강화	2.9 (▲0.2)	10.3 (▲1.0)	3.2 (▲0.3)	12.5 (▼0.3)	10.9 (▲6.9)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전담기구 마련	4.3 (▲0.4)	7.9 (▲3.2)	3.5 (▲1.1)	11.8 (▲5.8)	5.9 (▲3.4)
부패 친화적인 연고주의 문화 개선	2.1 (▲0.4)	4.0 (▲0.7)	7.6 (▲1.6)	7.0 (▲4.0)	4.4 (▼4.0)